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이 동 형

목 차

■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

1.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필요성 증대
2. 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 현황 및 활동
3. 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의 특징과 평가

제3장 NEAR의 출범과 협력프로젝트

1. NEAR의 창설과 발전
2. 분과위원회의 협력프로젝트 추진현황
3.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분석
4.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제4장 협력프로젝트 활성화와 사무국의 역할 강화

1. 협력프로젝트의 단계적 활성화 방안
2. 사무국의 역할 강화 방안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 설 문 지
-

요 약

I. 연구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조류 속에 새로운 행위자(actor)로 등장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양자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 역시 지방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외교류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경상북도는 가속화되는 지역경제의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 추세에 대응해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차원의 국제기구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을 주도하고 있음.
- NEAR가 경쟁력을 갖추고 동북아 지역차원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회원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NEAR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NEAR의 발전과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임.

II. 국제환경의 변화와 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

1.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필요성 증대

- 국제환경의 변화는 지난 세기말 냉전이 붕괴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인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교통·통신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환경 변화를 가속화시킴. 이는 결국 ‘세계화’(globalization)를 추동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행위주체와 이슈영역을 다양화시키고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세계화’는 ‘지방화’(localization)를 동반함. ‘지방화’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촉진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대외관계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과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치적 영역에서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형태는 양자간 교류에서부터 다자간 교류와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특히 자치단체는 국제기구가 세계적인 조직망(global network)을 갖추고 있어 정보의 교환이나 입수,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는 20세기 초반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에서부터 지역적 차원의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
- 동북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세계경제체제의 다극화와 블록화 추세에 따른 지역경제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들이 등장함. 동북아 지역의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들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북한문제 등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회피하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2. 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 현황 및 활동

가. 국가차원 국제기구의 자치단체관련 협력활동

-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기구
 - ‘유엔개발계획’(UNDP)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원조 등을 목적으로 1965년 설립되었으며, 저발전국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환경보존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아·태지역의 경제, 사회개발을 목적으로 1974년 재출범했으며, 경제협력과 사회개발, 환경보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유엔인간정주센터’(Habitat)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분권체제 구축, 자치단체의 국제협력과 연대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본래 빈곤퇴치와 개발국 원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해지자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와 그 연합체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재정경영과 예산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정책도구를 개발, 지원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유럽지역위원회는 EU내 자치단체간 상호협력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외 지역 개도국에 대해서도 재정원조와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음.

나.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와 동북아 지역협력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은 세계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과 ‘국제도시연맹’(FMCU), ‘세계도시연합’(UTO),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을 통합해 2004년 5월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 국제기구임. UCLG는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제고와 자치단체의 이익 대변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발전에 관한 프로그램 추진과 네트워크 구축, 자치단체간 파트너십 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유럽자치단체 및 지역협의회’(CEMR)는 유럽지역 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1951년 설립된 유럽지역 자치단체 협의체임. CEMR는 17개 전문분야별 working group과 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 이익 대변과 자매결연 지원,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교류회의’는 한일해협권역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이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1992년 출범한 협의체임. 이 협의체에서는 한일해협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광역관광협회사업과 경제교류촉진사업, 연구기관 공동연구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는 동해와 면한 자치단체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1994년 결성된 협의체임. 이 협의체에서는 관광촉진협의

회와 경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관광정보에 대한 정례·수시 교환과 경제교류 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는 1991년 창설된 ‘동아시아(환황해) 도시회의’를 모체로 2004년 출범한 협의체로 지역경제 발전과 국제교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OEAED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환경 비즈니스, 물류, 그리고 관광을 중점교류분야로 설정하고 공동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다.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의 특징과 평가

-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
 - 저개발국가 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임.
 -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타 자치단체의 선진 경험이나 기술 이전 및 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임.
- 동북아 지역차원의 국제기구
 -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있음.
 - 짧은 역사성으로 기구의 운영시스템과 협력사업들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 기업과 민간의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산·관·연(학)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함.
 -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며, 회원단체의 결속력 낮고 역내외 타 기구와의 교류관계가 미진함.

III. NEAR의 출범과 협력프로젝트

1. NEAR의 창설과 발전

-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간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1996년 출범한 NEAR는 지난 10여 년 동안 36개 자치단체가 신규 가입함으로써 2006년 현재 65개 자치단체를 회원단체로 둔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하고 있음.

- NEAR는 총회와 사무국, 실무위원회, 그리고 7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2. 분과위원회의 협력프로젝트 추진현황

가.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경상북도가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간 경제통상 교류 촉진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프로젝트인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는 지역 공무원과 기업체, 바이어 등이 함께 학술회의와 통상비즈니스 등을 진행하는 복합 경제이벤트 프로그램임.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통해 통상촉진 세미나와 투자정책 정보교류회, 통상상담 등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다자간 전문품목 상담회’를 개최함.
-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단체 기업인과 해외 바이어 등에게 통상정보를 제공하고자 2006년 5월부터 ‘동북아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나. 문화교류분과위원회

- 문화교류분과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다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고양시킬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본 시마네현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교류분과위원회는 2001년 11월 처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청소년교류사업’과 ‘국제문화팔레트사업’ 등의 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다. 환경분과위원회

- 환경분과위원회는 일본 토야마현을 중심으로 역내 환경 정보 교환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인식 강화,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동해와 황해 연안 해변 표착물 조사’와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동북아 국제환경 심포지엄’, ‘동북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엄’ 등의 공동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 옴.

라. 방재분과위원회

- 방재분과위원회는 일본 효고현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방재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의 방재 능력 향상과 지역간 연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방재분과위원회에서는 매년 회원단체들에게 방재연수와 방재거점시설에 대한 시찰 기회를 제공하고, 방재연구의 성과 등을 회원단체에 제공하고 있음.

마. 일반교류분과위원회

- 토야마현이 주도하고 있는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간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강화 및 인재육성과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사업’과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조사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의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3.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분석

가. NEAR 참여 목적

- “NEAR에 참여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27개 응답단체 중 24개 단체가 경제통상부문에 참여 목적이 있음을 응답해 회원단체 대부분이 경제교류와 협력에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분과위원회 활동과 운영

-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
 -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 조사에서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에 가장 많은 각각 18개의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단체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NEAR 참여 목적”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기 때문임.
 - “NEAR 참여 목적”에서 환경협력에 대한 관심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과위원회에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이유는 분과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회원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협력프로젝트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임.
- 분과위원회 활성화 의견
 -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현실성있는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됨.
 - “새로이 참여하거나 신설을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단체들이 답변이 없거나 희망하지 않다고 응답해 분과위원회의 추가 참여 또는 신설에 대한 관심이 낮음을 알 수 있음.

다.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 협력프로젝트 참여 현황

-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23개 회원단체 중 ‘동북아시아비즈니스축진회의’에 가장 많은 회원단체(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는 ‘NEAR 참여 목적’과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회원단체의 관심이 경제교류와 협력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의견

- ‘동북아시아비즈니스축진회의’에 대해서는 “실질적 이익에 바탕을 둔 사업추진”과 “민간전문가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 환경과 방재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국가에 대한 공동 요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됨.
- “추가 참여 또는 신설 희망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존의 협력프로젝트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4.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가. 전반적 평가

○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 첫째, 분과위원회가 회원단체들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체계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음. 그러나 소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둘째, 분과위원회 소속단체와 협력프로젝트 참여단체가 일치하지 않음. 이는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비소속단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함.

○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 첫째,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운영과 성과에 대한 욕구가 높음.

- 둘째,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심포지엄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함.
- 셋째, 새로운 분과위원회나 협력프로젝트의 개발보다는 기존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음.
- 넷째,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분과위원회별 평가

-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의 높은 관심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가 다분히 형식적이며, 이 회의에서 열리는 수출상담회 역시 개최지 상품 중심이고, 협력프로젝트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
- 문화교류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력프로젝트들이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기구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협력프로젝트와 부분적으로 중복(청소년교류사업↔인재육성사업)되고 있어 양자간 재조정이 필요함.
- 환경분과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협력프로젝트의 선정과정이 체계적(3단계: 제안조사 → 참가의향조사 및 조정 → 협력프로젝트 제안단체에 의한 사업추진)이라는 점. 이러한 선정과정을 통한다면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방재분과위원회의 특징은 자치단체간 방재관련 능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효고현이 일방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와 공동포럼 및 재해민 원조나 재해 예방관련 협력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함.
-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율은 높지만 코디네이터인 토야마현을 대신할 단체가 없으며, 문화교류분과위원회와의 활동범위가 중복되고, 정보교류와 조사수준을 벗어난 실질적인 교류협력프로그램이 부족함.

IV. 협력프로젝트 활성화와 사무국의 역할 강화

1. 협력프로젝트의 단계적 활성화 방안

가. 단기적 활성화 방안

- 첫째, 환경분과위원회의 3단계 협력프로젝트 선정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임. ‘제안조사’를 통해서도 회원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협력프로젝트의 개발과 회원단체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참가의향조사 및 의견조정’과정에서는 회원단체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추진’단계에서는 협력프로젝트의 제안단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둘째, NEAR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교류와 공유 및 대외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셋째, 민간단체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민간단체의 분과위원회 참여는 실현가능한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넷째,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코디네이터 외의 회원단체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과 회의 개최시 관련 협력프로젝트를 동시에 개최하는 고려할 수 있음.

나. 중장기 활성화 방안

- 첫째, 코디네이터 외에 국가별 1개씩의 회원단체를 선정해 이들에게 코디네이터에 대한 서포터의 역할을 수행케 한다면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 둘째, 공무원과 학자, 기업인,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보 교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면, 회원단체간 정보 교류와 공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전문성과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이 밖에도 회원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은 그 자체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 국가와 동북아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짐.

2. 사무국의 역할 강화 방안

- 첫째, 정보 교류와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도모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핵심 정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회원단체들에게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공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둘째,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정보 집합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분과위원회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각 회원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유사사업을 조사, 발굴해 NEAR 차원의 협력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셋째,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 및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각 회원단체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연구기능을 완비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대내외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협력프로젝트가 타 국제기구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V. 결 론

- 출범이후 10여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온 NEAR는 최근들어 내부적으로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비롯한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NEAR가 회원단체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협력프로젝트는 아직까지 회원단체간 상호 이해관계의 증진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회원단체들은 경제 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가장 높고, 신규보다는 기존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상호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유 및 적

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단체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단기적으로는 타 분과위원회에서도 환경분과위원회의 3단계 프로젝트 선정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과 NEAR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운영 및 활용, 민간전문단체의 분과위원회 참여 등을 제시함.
 -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서포터(1국 1자치단체) 선정과 공무원, 학자, 기업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의 정기적 개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유인 등을 제안함.
 -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은 정보 교류와 확산의 구심점 역할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연구와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타 국제기구와의 연계 협력도 강구해야 함을 제안함.
-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동북아시아비즈니스촉진회의’의 활성화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간경제단체(KOTRA, JETRO 등)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여
 - 둘째, ‘동북아시아비즈니스촉진회의’에 다양한 자치단체의 기업과 상품을 참여시킨 다국적 사업으로 확대 발전
 - 셋째, 환경분과위원회의 3단계 협력프로젝트 선정방식 도입
 - 넷째, 유명무실한 ‘민관투자촉진협의회’와 ‘동북아 기업박람회’ 재추진
 - 다섯째, 경제통상위원회 회의를 대구경북의 홍보 기회로 활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의 거대한 조류 속에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국제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중요한 행위자(actor)로 등장시켰다. 이에 따라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고유의 특성과 공동이익에 기초해 각자의 권한과 자원 능력에 따른 대외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은 세계적인 추세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외교류협력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지방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 특히 경상북도는 대외교류협력 활동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통상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시장개척 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나아가 경상북도는 오늘날의 국제교류와 협력의 형태가 개별 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형태에서 국제적인 조직을 통한 상시적이고 다면적인 교류형태로 발전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해 1996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라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했다. NEAR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6개국의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국제기구로, 회원단체간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오늘날 점차 가속화되는 지역경제의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 추세에 대응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활성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는 NEAR와 같은 지역차원의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등장해 활동하고 있다. 1992년에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교류회의’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와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가, 1995년에는 ‘동북아시아경제회의’가 출범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1991년부터 운영되어온 동아시아 경제인 회의와 시장회의를 통합한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OEAE)가 출범해 환황해지역 경제권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동북아 지역 국제기구들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단체간 상이한 경제적 수준과 낮은 결속력, 중복된 회원구성 등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구들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의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초보적인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경쟁력을 갖춘 기구를 중심으로 재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EAR가 경쟁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지역차원의 국제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NEA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원단체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회원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EAR가 경제통상과 문화교류 등 5개의 분과위원회¹⁾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원단체들이 희망하는 협력프로젝트를 조사, 발굴할 것이며, NEAR의 발전과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1) 2006년 개최된 제6차 NEAR 총회에서 ‘과학기술분과위원회’의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2006년 현재 분과위원회는 2004년 신설된 ‘변경협력분과위원회’를 포함해 7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설되어 준비단계에 있는 2개의 분과위원회를 제외한 5개의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NEAR가 출범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5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협력프로젝트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들이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관련 활동과 동북아 지역에 현존하는 지역차원 국제기구들의 협력활동, 그리고 NEAR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의 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를 병행한다.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의 활동과 NEAR 분과위원회 및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문헌과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회원단체와 사무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수행한다.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는 각 회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개방형질문 중심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의견조사 내용은 크게 'NEAR활동에서 각 회원단체가 얻고자 하는 부분'과 '분과위원회 활동과 운영' 및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NEAR 사무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화한다. 각 회원단체의 NEAR관련 업무 담당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조사의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접조사보다는 E-mail이나 Fax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채택하며, 그 결과를 취합,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헌·자료조사와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프로젝트를 평가하여 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2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

1.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필요성 증대

최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작금의 국제사회에는 지난 세기 우리를 불안케 했던 미국과 소련 중심의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 인한 상호 대립과 불신이 사라지고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정치·안보질서가 구축되면서 화해와 협력의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구촌’(global village)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계화’(globalization)를 추동하고 있는데,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민간, 지방, 국가 등 행위주체를 다양화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행위자였던 민족국가(nation state)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를 등장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주체들 간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촉진시켜 단일의 통합된 공동체와 시장을 형성케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경을 넘은 자유로운 상호교류(transactions)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대립과 경쟁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개별국가의 개념이 아닌 세계 공동체로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지역국가연합이나 세계체제의 수준에서 협력과 교류를 통한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을 세방화(glocalization: Global+Localization)시대라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화가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화는 국가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또한 국가권력이 중앙

에서 지방으로 상위정부에서 하위정부로 이전되면서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이전(Devolution of Power)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전세계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인 차원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의 유연성이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과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적 차원에서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기본적인 일대일 양자간 교류에서부터 시작해 다수의 자치단체와의 다자간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교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가 다양한 국가의 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적인 조직망(global network)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이나 입수,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혹은 자신의 입장이나 이해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동조 형성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913년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의 출범을 필두로 ‘국제도시연맹’(FMCU)와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세계도시연합’(UTO)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등장해 자치단체간 교류와 지방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2004년 IULA와 FMCU, Metropolis를 통합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가 출범해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UCLG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로 도시간 국제협력 증진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관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증대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부응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들도 UCLG 등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에 가입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차원의 국제기구를 조직해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차원의 국제기구의 등장은 냉전종식 후 국제사회에서 조성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의 다극화와 블록화의 추세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체제의 다극화와 블록화 추세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21세기에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유럽과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 중의 하나로 불리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의 상이성으로 인한 높은 상호의존성과 풍부한 부존자원, 고도의 성장잠재력 등은 지역협력과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는 탈냉전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북한문제 등과 같은 냉전시대의 잔재들 역시 공존하고 있어 지역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는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문제로 인해 국가차원의 다자간 협력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정치, 군사, 안보 등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다는 경제와 문화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차원의 국제기구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자간 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한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국 연안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경제권 형성을 추진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동북아 지역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동북아 지역에는 NEAR를 비롯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교류회의’와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그리고 OEAED 등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종식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제 활동영역에서 점

차 주체적인 세력으로의 등장을 요청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복잡한 동북아 지역의 환경 속에서도 세방화의 추세에 부응하면서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차원의 국제기구인접한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 현황 및 활동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국제기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 국제기구는 19세기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통신과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에 파생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탄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의 국제기구는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국가간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출발했으나, 국제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급속한 세방화로 인해 국제기구의 행위주체가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국제기구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 각각의 행위자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치단체와 관련된 국제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국제연합(UN)과 같은 국가차원의 국제기구로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로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경우이다.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기구는 전술했듯이 20세기 초 유럽지역에서 탄생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한 지원 및 협력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가차원 국제기구의 자치단체관련 협력활동

UN과 세계은행, 유럽연합(EU) 등은 국가차원의 국제기구로써 국가간 상호협력과

발전을 모색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류공영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제기구는 전문적인 산하기구를 통해 저발전 국가 또는 지역의 자치단체들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기구

국가차원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인간정주센터(UNCHS, 이하 Habitat) 등과 같은 산하기구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UNDP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원조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1965년 제20차 UN 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별 협력사업과 지역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NDP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유엔역량개발기금(UNCDF)을 동원하여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자치단체들의 역량강화와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화 촉진 및 지역발전 등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또한 UNDP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준비하면서 개발도상국가의 정부와 NGO, 자치단체들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오늘날에도 이들 국가에 ‘환경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DP는 세계은행과 UNEP와 함께 세계환경기구(GEF)의 집행기구로써 국제적인 협력망을 동원하여 지구온난화와 국제해양오염, 오존층 보존 등 세계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UNDP는 저발전국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환경보존을 위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²⁾

UN-ESCAP은 1947년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로 출발하여 1974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유엔 산하 세계 5개 지역위원회의 하나로 폭 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UNDP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UN-ESC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개발, 환경보존, 도시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지원과

2) 김익식(2004: 527); 안영훈(1999: 201-203); Somsey Norindr(1999: 22-23);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8-11); UNDP 홈페이지(www.undp.org);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세미나,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³⁾

UN의 인간 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Habitat는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정주회의’의 결과 설립된 ‘유엔인간정주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인간 정주를 위해 기타 UN 산하기구와 협력해 활동하고 있다. Habitat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인프라,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각 국가차원의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도시 환경 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및 공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도모함을 기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976년 밴쿠버 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된 1996년의 Habitat II 회의에서는 세계가 급속히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NGO 등이 함께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분권체제 구축, 그리고 자치단체의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Habitat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있다.⁴⁾

(2) 세계은행(World Bank)⁵⁾

세계은행은 본래 빈곤퇴치와 개발국 원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해지자 각국의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책임 하에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원하게 될 때, 효과적이면서 투명한 재정경영과 예산체계 등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 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정책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은행의 자치단체 역량강화전략은 독자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와 그 연합체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은행은 자치단체연합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력과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자치단체연합체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자치단체

3) 안영훈(1999: 203-20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16-21); UN-ESCAP 홈페이지(www.unescap.org);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22-2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1999: 50-51); UN-HABITAT 홈페이지(www.unhabitat.org);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5) 안영훈(1999: 204-206);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에 관련한 총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상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정책변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반자이면서 중요한 정보의 중심점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연합체는 세계은행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경영체계를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역으로 자치단체연합체는 세계은행의 지식경영활동을 시경영자, 시장 등 자치단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협력채널의 중심점이 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3) 유럽연합(EU) 유럽지역위원회⁶⁾

EU는 EU의 원조 및 협력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 신생국 등에 대한 원조와 협력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EU는 아프리카, 카리브연안, 태평양 지역 등에 산재한 70여 개의 저발전국들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중해 제3국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지역적인 구별을 하여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EU는 1994년 5월 9일 EU 회원국내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대표기구 겸 자문기구로써 유럽지역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Regions)를 만들어 EU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2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위원회와 EU의 장관회의 등이 의무적으로 이 유럽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EU는 이 조직을 통해서 EU의 회원국 내 각 자치단체간 상호협력과 지원체제를 갖추고 유럽 지역의 단결을 추진하고 있다.

EU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주로 1970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EU가 이전 EEC 체제일 때 유럽위원회령인 CEE 제443/92호(1992년 2월 25일)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 규정은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발전도상국가들과의 재정원조,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에 대한 여러 실천강령을 담고 있다. EU가 아시아 국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주된 목적은 인권보장, 민주화 지원, 효과적인 공공경영, 환경보호, 자유교류 확대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목표 하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대상이 되는 조직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통지역사회, 비정부단체 등 다양하게 협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6) 안영훈(1999: 206-210); 임종헌(2003: 66-6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2: 112-113).

EU는 유럽-아시아국가간 자치단체 환경협력사업으로서 1993년 도시간 협력사업인 자치단체 환경협력사업을 시작하여 약 2년 동안 유럽의 여러 도시 자치단체들이 도시환경관리(물, 정화처리, 쓰레기, 대기오염, 에너지 등)와 관련한 기술과 지식을 아시아 국가에 이전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나. 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와 동북아 지역협력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는 그 활동범위에 따라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적 차원의 대표적인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인 UCLG와 유럽지역의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인 유럽자치단체 및 지역협의회(CEMR),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협력활동을 살펴본다.

(1)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⁷⁾

UCLG는 2004년 5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온 기존의 3대기구인 IULA와 FMCU-UTO, Metropolis를 하나로 통합해 탄생한 세계 최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이다.

UCLG의 전신 중의 하나인 IULA는 1913년 설립되어 110여개 국의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었던 국제적인 자치단체 연합조직으로, 자치단체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다 나은 인간의 주거환경, 지역사회 경제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자치단체간의 정보와 기술교환을 장려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구체적으로 IULA는 국제사회에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투영하기 위해 UNDP와 세계은행 등과 같은 UN 산하기구나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IULA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의 자치단체를 비롯한 전세계 자치단체들의 분권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CIB: Capacity & Institution Building)’을 지원했으며, 자치단체간 국제협력사업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IULA는 자치단체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보수집과 연

7) 김홍래(2004: 539-558); UCLG 홈페이지(www.cities-localgovernments.org/uclg);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구 활동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했다.⁸⁾

FMCU-UTO는 인류 복지의 증진과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간 남북개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유럽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1957년 결성되었다. FMCU-UTO는 그동안 중남미·카리브해 연안과 지중해 연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등 4개의 지부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에 사업을 수행했다. 지부별로 추진된 주요활동을 보면, 중남미·카리브해 연안에서는 도시 상하수도 및 보건 개발사업과 지방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지방공무원 연수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지중해 연안에서는 사회경제개발사업과 연안도시 환경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이행되었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지방정부의 위상강화와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반행정관리에서부터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전수와 연수, 세미나, 현장교육 사업 등을 펼쳤다.⁹⁾

Metropolis는 세계 대도시의 인프라 정비와 도시 개발, 환경 보전, 경제 개발 등에 관한 정보와 의견 교환 및 기술 원조를 통해 도시 간의 국제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 캐나다에서 창설되었다. Metropolis에서는 주제별로 4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벌였다. 우선 개발기획·경영위원회에서는 주요 대도시의 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환경·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환경문제, 특히 수자원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했다. 또한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제조업의 실태와 경제가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사회·문화개발위원회에서는 대도시 청소년문제를 연구했다. 이밖에도 Metropolis는 회원도시 간의 정보교환을 장려하고 도시개발과 프로젝트 입안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¹⁰⁾

이러한 3대 기구를 통합한 UCLG는 UN과 같은 Global Governance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 강화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그리고 국제적인 조직으로의 체제 구축 등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8) 안영훈(1999: 210-21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27-31); 김병준(1999: 44-47);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9)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2003b: 102-103); 안영훈(1999: 217-21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32-35);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10) 김익식(2004: 530);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40-42);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UCLG는 우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 ‘국제Habitat 회의’와 ‘세계도시포럼’, ‘세계경제사회포럼’ 등과 같은 국제적인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역할을 증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UCLG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간 국제협력 증진과 자치단체 발전에 관한 프로그램 추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자치단체간 파트너십 강화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UCLG는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자치단체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협회역량강화(Association Capacity Building: ACB)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협회 간의 파트너십을 도모하며 협회가 없는 나라에는 협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CLG는 도시간 협력(City-to-City Cooperation)을 통해 학습과 교류를 추구하면서 주제와 지역별로 도시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UCLG는 CIB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경험을 교류하고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조사, 추적, 분석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UCLG는 회원 확충과 정보공유,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충실한 기획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유럽자치단체 및 지역협의회(CEMR)¹¹⁾

CEMR는 유럽지역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주도로 유럽지역 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민주주의를 증진시켜 하나의 통합된 유럽을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1년 설립된 유럽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CEMR는 조직 고유의 대표기능을 통해 유럽지역 각 자치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유럽지역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활동을 지원한다. 결연관계를 맺은 자치단체들에게

11) 안영훈(1999: 215-21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117-119); CEMR 홈페이지(www.ccre.org);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홈페이지(www.klafir.or.kr) 참조.

는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3~4년마다 각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유럽자매결연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CEMR는 유럽지역의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으며, 재정과 기술, 행정 등 자치단체 운영과 관련한 각 자치단체의 경험과 교류 노하우 전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특정분야의 심포지엄을 기획·개최하기도 한다. 나아가 CEMR는 지역정책과 교통, 환경, 기회균등, 거버넌스 등 17개의 전문분야별 working group과 위원회를 두고, 그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3)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교류회의¹²⁾

예로부터 한일해협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동해 지역과 환황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점인 동시에 한일 양국의 중요한 출입관문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제 환경의 변화와 지역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일해협권역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은 역내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교류회의’(이하 지사교류회의)를 출범시켰다. 현재 1시 3도 4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이 참가하고 있는 이 협의체는 매년 지사회의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호간 이해증진과 지역발전 도모, 청소년·문화·스포츠 교류, 지식 및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교류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사교류회의에서는 한일해협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 제안되어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사업’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주인공들의 상호이해와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문물 체험을 통해 국제적 능력 배양과 세계 시민정신을 함양케 한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의 고교생이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1주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 현지시찰과 의견교류회, 공동수련프로그램 등을

12) 김익식(2004: 523); 양기호(2004: 53); 신기현(1996: 173-174); 문장순(1996: 67); 한일해협연안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info.japan-korea-strait8.org) 참조.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둘째, 지사교류회의에서는 양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기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간의 광역적이고 다양한 환경기술과 공해방지대책 등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환경관련 교류사업으로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대기분야의 ‘산성우 공동조사’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된 수질분야의 ‘하천수질 생물검정 공동조사사업’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육수 및 그 집수역의 질소유동(flux)조사’ 등이 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간 공동번영과 우호증진, 양국 자치단체간 상호의견 교환 및 수산업 공동발전 모색을 위한 ‘수산관계 교류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1992년 회의에서 어업지원의 공동조사와 양식기술공동연구, 어업인의 안전조업에 관한 정보교환 등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 ‘수산관계 교류사업’에서는 양국의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주변해역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류공동방류사업’과 어업인 상호간 기술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업인친목교류사업’, 그리고 ‘어선의 안전조업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보교환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네 번째 사업으로는 ‘광역관광협의회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한일해협연안의 매력적인 해상과 육상 관광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루트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홍보와 양 지역의 상호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통해 한일 양국은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와 한일 관광가이드북 발간, 관광설명회 개최, 배낭여행객 상호교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양측 지역의 관광객 성향을 분석하여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설명회나 배낭여행객 교류를 통해 지사교류회의의 지역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교류촉진사업’은 제2회(1993년) 지사교류회의에서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일해협연안 상품전시, 상담회 개최를 제안하였고, 실무회의에서 사업추진방안 등을 협의함에 따라 공동교류사업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상품판매촉진단 파견과 상품구매상담회 개최, 경제교류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경제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특산물 전시와 한일상품 비교견학 등도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사업으로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교류영역 확대를 위한 ‘주민친선 이벤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에서는 전통 무용과 음악 등 전통민속예능공연과 축제 교류, 아마추어 스포츠 교류 등 민간부분에서의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전통공예 교류사업’은 1996년 제5회 지사교류회의에서 경상남도의 제안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한일해협권역의 각 지역들이 가진 역사·문화적 유사성과 전통공예문화의 독창성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경제활성화와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양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전통공예인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공동 팸플렛 제작과 기술융화사업 추진 및 전시·판매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덟째, 지사교류회의에서는 ‘연구기관 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과 관련한 공동연구와 연구기관 간의 학술·정보교류 및 연구원의 상호과견 등을 통해 한일해협권이 가진 현안을 해결하고,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증진, 그리고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이 사업에서는 ‘한일해협권 지역산업의 상호교류촉진 방안’과 ‘한일해협권의 비교연구’ 등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었고, ‘해협권포럼’이라는 저널발간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아홉째, 1995년 지사교류회의에서 채택된 ‘지역진흥단체(지역사회단체) 교류지원사업’은 지금까지의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도현 해당 부서간 협의를 거쳐 2001년부터 여성정책 전문단체 교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여성단체교류사업은 소비자문제와 생활환경문제 등 여성들이 솔선, 실천할 수 있는 문제를 테마로 하여 양국을 비교함으로써 상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지사교류회의에서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방재교류사업’과 ‘과학기술분야교류사업’, ‘친환경농업분야 기술·정보교류사업’, ‘만화 Festival’ 등을 제안, 구체화하고 있다.

(4)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¹³⁾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이하 지사·성장회의)는 90년대 초반 동북아 지역

13) 최승업(2004a: 51-53); 최승업(2004b: 79-81); 최승업(2000: 105-106); 양기호(2004: 52-53); 신기현(1996: 173); 문장순(1996: 67-68); 강원도청 홈페이지(www.gico.go.kr) 참조.

에 화해와 협력이라는 탈냉전적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냉전시기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동해와 면한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1994년 11월 강원도를 비롯해 중국 길림성과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등 4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후 1999년 제6차 회의에서 몽골의 중앙도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5개국 5개 지방정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지사·성장회의는 그 동안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과 경제, 사회, 문화, 관광,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회원단체들은 경제와 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두고 1996년과 1997년 ‘관광촉진협의회’와 ‘경제협의회’를 각각 구성, 운영하고 있다. ‘관광촉진협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관광정보에 대한 정례·수시 교환과 두만강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해상항로(속초-나진-훈춘)를 이용한 환동해권 다국관광 전개, 지역간 관광사중수속의 단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의회’에서는 육·해·공 운송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교류 기반 조성 및 지역간 홈페이지 개설 및 사이버 무역박람회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중소기업간 교류 지원, 환동해권 경제교류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회원단체간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사·성장회의에서는 동북아 각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2006년 8월 개최된 제11차 지사·성장회의에서 지도자들은 민간주도의 경제협의회 구성과 상설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관련 단체장과 기업 등 민간 주도로 구성된 경제협의회는 각 지역의 경제정보에 대한 교환의 장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추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사·성장회의에서는 속초-훈춘-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사카미미나토를 연결하는 백두산 항로의 활성화와 북한을 포함한 환동해권 6개 지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의 연계 개설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간 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5)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¹⁴⁾

OEAED는 황해 연안에 위치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주요 10개 도시¹⁵⁾와 각 도시의

14) 신기현(1996: 174-175); 문장순(1996: 67); OEAED 홈페이지(www.pysih.net/kr) 참조.

15) 회원도시: 한국의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중국의 대련시, 청도시, 천진시, 연대시, 일본의 후

경제단체들¹⁶⁾이 국경이나 제도를 초월한 도시간 연계와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2004년 11월 창설된 지역차원의 국제기구이다. ‘동아시아 10개 도시 시장회의’와 ‘동아시아 10개 도시 경제인회의’를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OEAED는 1991년 일본 기타큐슈시의 제안에 따라 발족한 ‘동아시아(환황해) 도시회의’를 그 모체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 도시회의’는 당초 한·중·일 3개국 6개 도시(한국의 인천시, 부산시, 중국의 대련시, 청도시, 일본의 기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에서 민간 경제인에 의한 ‘경제인회의’와 전문 학자들에 의한 ‘지식인(전문가)회의’로 시작했으나,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1993년부터 ‘지식인(전문가)회의’가 ‘시장회의’로 격상, 개최되면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회의체로 발전했다. 이후 10여년 동안 ‘동아시아 도시회의’는 ‘시장회의’와 ‘경제인회의’를 각각 개최하면서 환경보전 세미나를 비롯해 청소년 스포츠 교류사업과 무역확대를 위한 전시회 및 상담회, IT교류 촉진사업, 나아가 연구기관 교류회의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도시회의’는 ‘시장회의’와 ‘경제인회의’를 분리, 개최함으로써 연계시키지 못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고, 도시 간 네트워크의 심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동아시아 도시회의’를 토대로 출범한 OEAED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환황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AED는 지역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4개의 산업, 즉 제조업과 환경 비즈니스, 물류, 그리고 관광을 중점교류분야로 제시하고, 그 실천적 기능을 부여한 4개의 부회(제조업부회, 환경부회, 물류부회, 관광부회)를 산하기관으로 설치했다. 각 부회에서는 각 도시의 기업가와 기술자, 연구자 등이 함께 참여해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정책제언, 뉴 비즈니스의 발굴 등을

쿠오카시, 기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

16) 회원단체: 한국의 부산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중국의 중국국제상회 대련상회, 청도상회, 천진상회, 연대상회, 일본의 후쿠오카상공회의소, 기타큐슈상공회의소, 시모노세키상공회의소

추진하고 있다.

또한 OEAED에서는 각 부회의 활동을 통해 실현할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 한정관 ‘동아시아 FTA’ 창설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2개국 간 FTA협상에 있어서도 농업문제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관세문제를 제외하고, 지방 도시 간에서 물류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 시스템(통관수속의 간소화, 코스트 절감, 항만 사용료 및 착륙료 우대조치 등)을 만들어 FTA와 같은 효과를 낳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황해 환경모델 지역을 창출하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배려와 산업활동의 양립을 도모하여 새로운 순환형 사회를 창출함으로써 환황해 지역이 ‘세계의 환경모델 지역’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뉴 비지니스 창출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이는 국경을 넘어 선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황해 10개 도시간 규제완화 실현과 비즈니스 환경 정비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넷째, 환황해 관광브랜드 전략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환황해 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황해의 해’ 등 대형 캠페인을 전개하여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환황해 브랜드를 확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교류 및 인재육성 플랫폼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원 도시에 있는 기술계 주요 대학간 공동연구나 단위 호환성을 비롯하여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산학협력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국제적 산학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회에서는 중점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부회’는 ‘비즈니스 인프라 정비’와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성’, ‘국제적인 산학연대 구축’,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을 중점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부회’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업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와 웹사이트를 이용한 비즈니스교류, 전시회와 상담회 개최, 중소기업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지방정부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 가지 액션플랜, 즉 ‘비즈니스 인프라정비’와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각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채택하여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고 환황해지역의 기간산업인 IT와 반도체 관련 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분야를 구체화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회’에서는 환황해 지역을 세계적인 환경모델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협력의 네트워크화’와 ‘환경모델지역 창출’, ‘리사이클 국제연대’ 등을 중점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협력의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환경보전 심포지엄과 회원도시의 환경 실태 조사 및 민간기업 니즈 조사 등을 통해 국제 환경협력을 기반으로 한 환경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키타큐슈시의 국제기술협력협회 환경협력센터와 같은 기구를 각 회원도시에 설치해 환경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규제를 표준화하고 환황해 지역의 그린화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모델지역 창출’을 도모하고, 산업제품이나 폐기물의 처리 및 재자원화에 필요한 기술과 첨단설비, 연구 등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환황해권의 환경 리사이클의 국제연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회는 지난 2004년과 2006년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환경과 환경산업에 대한 각 도시의 정보를 수집·정리해 각 도시가 공유할 것과 환경관련 산·학·연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는 등 각 회원도시의 환경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심포지엄과 박람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환경비즈니스에 대한 각 도시의 공통인식을 조성하고, 연구와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환황해 경제권의 기간산업인 해운과 항만, 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류부회’의 중점 추진 프로젝트로는 ‘원활한 물류축진을 위한 협력’과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물류네트워크의 충실화’ 등을 들 수 있다. ‘원활한 물류축진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수속의 간소화나 자동승인 등과 같은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과 회원도시간 물류 협의회 설치 및 호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서는 통일된 항만정보시스템과 물류의 표준화, 인증시스템·사전통관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한다. ‘물류네트워크의 충실화’에서는 국제복합일관수송체제¹⁷⁾ 확립과 회원단체간 직항이나 셔틀 항공편 확충 등을 통한 고속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물류부회’는 2005년과 2006년의 회의를 통해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물류부회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점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회 회

17) 국제복합일관수송이란 2국간 이상에 걸쳐 특정의 운송품이 2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의해 연속적으로 수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함.

의에서 채택된 액션플랜으로는 공동 프로젝트로 항만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중앙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으며, 개별 프로젝트로는 회원도시의 호혜제도 도입과 물류·교통 네트워크 충실, 물류정보시스템 네트워크화, 환황해지역 사업자간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지역한정판 FTA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부회’는 ‘동아시아 10개 도시 관광포럼’ 개최와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TPO)와의 연대, 관광안내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관광정보 네트워크화’와 환황해 브랜드 창출을 통한 ‘관광브랜드전략 전개’, 그리고 관광루트 개발과 관광 공통카드 발행 등의 ‘관광소프트 개발’을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부회’에서는 ‘관광정보의 네트워크화’와 ‘관광브랜드전략 전개’, ‘관광소프트 개발’ 등을 액션 플랜으로 채택, 추진하면서 환황해 지역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회조직은 뉴비즈니스 발굴, 정책제언, 지역간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맡아 환황해 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의 특징과 평가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방화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느냐 또는 스스로의 생존활로를 모색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방자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사회의 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들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자치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UN과 같은 국가 중심의 국제기구는 산하 전문기구를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ULA와 같은 자치단체 중심의 국제기구 역시 자치단체간 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인류공영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국제

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에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저개발국가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UNDP를 비롯한 IULA와 FMCU-UTO 등의 국제기구들은 후진국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경제개발사업과 도시인프라 정비 및 개발사업,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환경보존사업, 민주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왔다.

국제기구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경험이나 선진기술 이전 및 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심포지엄을 기획, 개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들은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UNDP는 세계은행과 UNEP와 함께 지구온난화와 국제해양오염, 오존층 보존 등 세계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ULA는 국제사회에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투영하기 위해 UNDP와 세계은행 등과 같은 UN 산하기구나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들은 타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코자 하는 것이다.

나. 동북아 지역차원의 국제기구

동북아 지역차원의 국제기구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보면, 우선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교류와 협력에 주안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들이 민주화 지원과 같은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해, 동북아 지역 국제기구들이 비정치적 영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동북아 지역이 처한 국제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문제를 비롯

한 영토분쟁과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이것이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활동을 최소화하고,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국제기구의 두 번째 특징은 짧은 역사성으로 인해 기구의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및 협력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구들은 지역 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대한 선행 경험이나 지식,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 협력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역시 지속적인 추진이나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 그리고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에 실패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 동북아 지역 국제기구들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경험은 국제적인 기구로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 국제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기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긴밀한 산·관·연(학)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산·관·연의 느슨한 연계로 인해 지역 기구의 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협력사업들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든지, 지속성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과 연구기관, 나아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해협연안 지사교류회의’에서는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OEAED에서는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기구운영에서도 경제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구의 활성화와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개발 및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북아 지역 국제기구들은 각국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과 각 기구의 협력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원단체의 낮은 결속력과 역내외 타 기구와의 교류관계가 미진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NEAR의 출범과 협력프로젝트

최근 개최된 제6차 NEAR 총회(2006년 9월 13~14일, 부산)에 참가한 대부분의 회원 단체들은 이제 NEAR가 회원단체 간 형식적인 친분관계를 맺는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전반적인 NEAR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를 회원단체들에 대한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를 통해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NEAR의 창설과 발전

1990년대 동북아 지역에서는 탈냉전과 세계화로 인한 지역 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증대, 그리고 지역차원의 교류·협력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기구들이 등장했다. NEAR 역시 이러한 지역의 국제환경 속에서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역차원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간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제사회가 화해와 협력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와 영토 문제, 역사문제 등으로 국가간 협력과 협의체 구성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입장에서 NEAR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자치단체가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6년 공식 출범한 NEAR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과 몽골 등 2개국에서 36개 자치단체가 신규 가입함으로써 2006년 현재 동북아 지역 65개 자치단체를 회원단체로 둔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했다.(<표 3-1> 참조)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

고 있는 NEAR는 출범과 더불어 현장을 제정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구의 이
 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표 3-1> 회원단체 현황(2006. 1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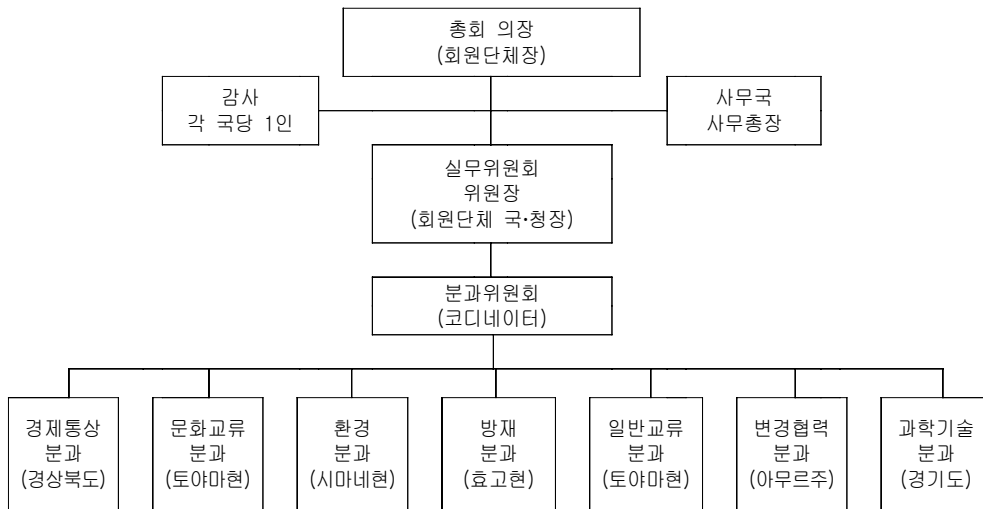
국가명	개수	자 치 단 체 명 (가입연도)
한 국	11	경상북도(96), 경상남도(96), 강원도(96) 경기도(96), 충청북도(96), 충청남도(96), 전라북 도(96), 전라남도(96), 제주도(96), 부산광역시(00), 대구광역시(06)
중 국	6	흑룡강성(96), 하남성(96), 산둥성(96), 영하회족자치구(00), 호북성(06), 호남성(06)
일 본	10	니이가타현(96), 토야마현(96), 돗토리현(96), 시마네현(96), 효고현(96), 교토부(96), 아 오모리현(96), 이시가와현(96), 후쿠이현(96), 야마가따현(98)
러시아	14	하바롭스크변경주(96), 사할린주(96), 아무르주(96), 캄차카주(96), 이르쿠츠크주(96), 사 하(야쿠찌야)공화국(96), 부랴찌야공화국(96), 치타주(96), 연해변경주(98), 우스찌-오르 진스키부리아트자치구(02),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06), 톱스크주(06), 프이바공화국 (06), 알타이변경주(06)
북 한	2	함경북도(02), 나선특급시(02)
몽 골	22	투브아이막(98), 쉘레기나이막(02), 울란바토르시(06), 아르한가이아이막(06), 바얀울지아이 막(06), 바얀혼고르나이막(06), 불간나이막(06), 고비알타이아이막(06), 고비쑹베르나이막 (06), 다르한나이막(06), 도르노드나이막(06), 도르노고비나이막(06), 툽트고비나이막(06), 자 브한나이막(06), 오르혼나이막(06), 우부르한가이아이막(06), 웡스고비나이막(06), 수흐바 따르나이막(06), 읍스나이막(06), 호브드나이막(06), 홉스골나이막(06), 헨티나이막(06)

6개국 65개 단체

* 출처 : 경상북도 및 NEAR 사무국 내부자료

NEAR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조직과 그 주요활동을 살
 펴보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와 사무국, 실무위원회, 그리고 7개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NEAR 조직



* 출처 : NEAR 사무국 내부자료

우선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2년마다 의장 단체18) 소재지에서 개최되며, 현장의 개정과 회원의 입회 의결, NEAR 사업 계획의 결정 및 집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NEAR는 총 6차례의 총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제정 및 개정과 분과위원회와 상설사무국의 설치, 회원단체 범위 확대와 더불어 신규 회원단체의 가입 승인 등을 논의, 의결하였다. 특히 최근 개최된 제6차 총회에서는 NEAR 회장 제정과 ‘자문위원회’ 신설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차기 총회 개최지(산동성)를 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를 신규 회원단체(4개국 27개 자치단체)로 받아들였다.

18) 의장단체의 임기는 2년이며, 2000년 효고총회까지는 총회를 개최한 자치단체장이 차기총회 개최 시까지 의장직을 수행했으나, 2002년 하바로프스크총회에서 차기총회 개최단체가 총회 개최 시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장을 변경.

<표 3-3> 역대의장단체와 총회

구 분	의 장 단 체	기 간	총 회 개 최
초대의장단체	경상북도	1996. 9 ~ 1998. 10	제1차(1996. 9)
제 2 대	토야마현	1998. 10 ~ 2000. 9	제2차(1998.10)
제 3 대	효고현	2000. 9 ~ 2002. 9	제3차(2000. 9)
제 4 대	하바롭스크변경주	2002. 9 ~ 2002. 9	제4차(2002. 9)
제 5 대	흑룡강성	2002. 9 ~ 2004. 9	제5차(2004. 9)
제 6 대	부산광역시	2004. 9 ~ 2006. 9	제6차(2006. 9)
제 7 대	산동성	2006. 9 ~ 2008. 9	

* 출처 : NEAR 사무국 내부자료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단체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며, 사업계획과 개별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회원단체 간의 의견조정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논의, 결정한다. 그동안 실무위원회에서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제통상과 문화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NEAR의 운영체계문제와 회비분담문제, 회장제정문제 등을 논의, 결정하여 총회에 회부했다. 특히 실무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상설화와 상설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 결정했으며, 제6차 실무위원회에서는 NEAR의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 개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실무위원회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되며, 상호 호선에 의해 선출된 코디네이터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연합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나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회원단체가 제안한 개별 프로젝트를 검토,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차 총회에서 ‘과학기술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6년 현재 모두 7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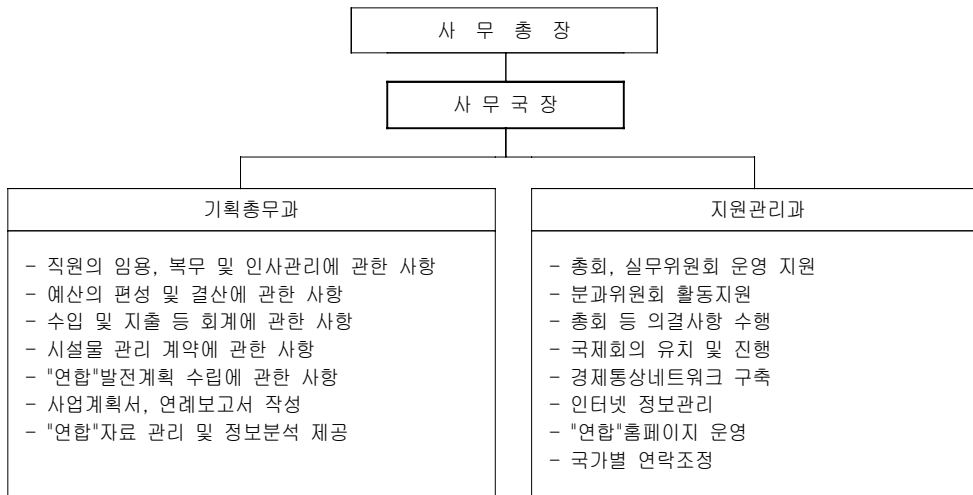
사무국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총회와 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는 상설집행기관으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으로 연임 가능

하다. 이러한 상설사무국제도는 경상북도의 제안과 회원단체들의 합의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2004년까지 시행된 순회사무국제도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즉, NEAR가 1996년 창설과 더불어 채택한 순회사무국제도는 사무국이 의장단체의 교체와 함께 이동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회원국간 신속한 정보 교환과 전파기능의 구심점 역할이 미흡하며, 회원자치단체간 유사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NEAR의 장기발전 프로그램 개발과 비전 제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외적으로도 NEAR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입지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국제기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회원단체들은 이러한 순회사무국제도의 문제점을 사무국의 상설화를 통해 해결코자 했으며, 그 결과 2000년 9월 효고현에서 개최된 제3차 총회에서 공론화되었다. 이후 2001년 2월 효고현(당시 사무국)에서 열린 실무소위원회 를 시작으로 2004년 9월(제5차 총회, 중국 흑룡강성)까지 3년 8개월 동안 상설사무국 설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설사무국제도의 채택과 사무국의 경상북도 설치가 결정되었다.

2005년 5월 경상북도 포항시에 개소한 상설사무국은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조직을 정비하고 NEAR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사무국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1국 2과의 조직을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을 파견 또는 충원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사무국은 회원단체 홍보·전시관과 NEAR 공식 홈페이지(경제통상 네트워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단체 확충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홍보단을 파견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와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등 사무국의 기반구축과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로 사무국의 회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최근 몽골의 20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4개국에서 27개 자치단체가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함으로써 성과를 보였으며, 총회와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3개국 회원단체에서 각 국별 1명씩의 직원을 파견받아 사무국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사무국에서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단,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국을 방문하는 등 타 국제기구와의 교류관계 증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4> 사무국의 조직과 기능



* 출처 : NEAR 사무국 내부자료

2. 분과위원회의 협력프로젝트 추진현황

2006년 현재 NEAR에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7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1998년 개최된 제2차 NEAR 총회에서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방재분과위원회, 그리고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었고, 변경협력분과위원회는 2004년의 제5차 총회에서, 과학기술분과위원회는 2006년 개최된 제6차 총회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 절에서는 최근에 신설되어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의 개발이 논의단계에 있는 변경협력분과위원회와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제외한 5개의 분과위원회와 그 협력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의 제안에 의해 1998년 제2차 NEAR 총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분과위원회로, 회원단체간 실효성있는 경제통상 교류를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아의 공동번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1999년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주요활동으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와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자간 전문품목 상담회’ 그리고 ‘동북아 경제통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설치 이전인 1998년부터 경상북도가 시작한 경제교류사업으로, 동북아 경제활성화와 통상진흥을 위해 동북아지역 공무원과 기업체, 바이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회의와 통상비즈니스 등을 진행하는 복합 경제이벤트 프로그램이다. 이 회의는 1999년 경상북도가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맡으면서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통해 통상촉진 세미나와 투자정책 정보교류회, 통상상담, 특산품 및 카탈로그 전시, 산업시찰 등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제3회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에서는 2,625만불의 수출상담과 155종 1,500여점의 상품전시가, 제4회 회의에서는 1억 4,702만불의 수출상담과 129종 1,000여점의 상품전시가, 제5회 회의에서는 2,160만불의 수출상담과 80종 1,000여점의 상품전시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2005년 제6회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다자간 전문품목 상담회’에서는 1,000만불의 수출상담과 500만불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는 회원단체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통상 네트워크’는 동북아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 기업인과 해외 바이어 등에게 통상정보를 제공하고자 2002년 제2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가 제안한 것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2006년 5월 구축이 완료되었다. 회원단체의 기업과 상품 소개, 거래 알선, 투자정보 제공 등 경제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 시스템인 ‘경제통상 네트워크’는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영어 등 6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국 374개 기업에서 6,563개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는 공무원과 민간경제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투

자촉진협의회'의 구성을 계획함으로써 분과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나. 문화교류분과위원회

문화교류분과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고양시키기 위해 문화와 학술, 예술 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1998년 설치되었으며, 일본의 시마네현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11월 처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동북아 지역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문화교류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청소년교류사업'과 '국제문화팔레트사업' 등의 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해 각 지역의 문화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교류사업'은 2002년 한중수교 10주년, 중일수교 30주년, 한일월드컵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중·일 정부가 합의한 범국민적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한·중·일 교류의 날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청소년교류사업'은 일본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한국 경상북도와 중국 영화회족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중·일 3국 청소년들의 폭넓은 해외체험과 교류를 통한 국제역량의 제고 및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사업은 3개국 3개 단체들이 각각 주관하여 상호 순회 개최하였으며, 상호문화체험과 어울림 한마당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실제로 '한·중·일 교류의 날개'는 2002년 8월 중국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 프로그램이 2003년 2월까지 일순(一巡)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도 또 한 번 일순(一巡)하면서 전통문화체험과 음식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중·일 교류의 날개'는 2004년부터 중국의 길림성과 러시아의 연해주 청소년이 참여하면서 '동북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로 확대, 발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6년에도 중국 흑룡강성과 러시아 사하공화국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양한 문화의 이해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문화팔레트 in 시마네 사업'은 동북아 지역의 예술단체를 초빙, 공연하고 주민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2004년에는 중국 영화회족자치구의 가무단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민요단을 초청했으며 2005년에도 중국 영화회족자치구의 가무단을 초청하여 공연과 일본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벌임으로써 공연단과 주민들의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다. 환경분과위원회

1998년 제2차 NEAR 총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토야마현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환경관련 정보 교환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인식 강화,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21세기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한 지역내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환경관련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치단체 간 의견 조정과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 협의하고 있다. 환경분과위원회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 및 추진과정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참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의 제안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참가 의향조사와 의견 조정을 거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 결정된 개별 프로젝트를 제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 추진된 개별 프로젝트로는 ‘동해와 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와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동북아 국제환경 심포지엄’, ‘동북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엄’ 등이 있다.

‘동해와 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는 1999년 토야마현의 제안에 의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동북아 지역의 공유재산인 동해 및 황해의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안 표착물 및 매물물을 연안 지자체 및 NGO 등이 조사하여 해변의 환경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해양환경보전대책과 폐기물대책, 어장보전대책 등을 강구하며 지역주민의 환경 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간 4회 실시되고 있는 ‘동해와 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프로젝트는 그 동안은 매년 9~10월경 1회 실시되었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되고 있는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는 일본과 대륙(러시아 극동지역)을 왕래하는 철새의 이동경로와 수명, 번식시기, 연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토야마현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참가 자치단체의 민간단체와 청소년이 참여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동북아 지역에 널리 알림으로써 철새의 생태 규명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류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환경 심포지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보전대책과 국제환경에 관한 노하우 및 기술 등의 정보 교환 및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계협력의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과 한국, 러시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었다. 1999년 효고현이 제안한 ‘동북아 환경평가 공동사업’이 관련단체와의 의견 조정을 통해 발전한 이 프로젝트는 2001년에는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서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주제로, 2002년에는 충남 아산시에서 “유기성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하여”를 주제로, 2003년에는 “하천의 수질관리대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환경학습 및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 고양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2003년 토야마현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04년에는 우리나라 충남 보령시에서 수질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한·중·일·러 4개국 8개단체 37명의 중학생이 모여 실시되었으며, 2005년에는 중국 요녕성 선양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환동해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현상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지역의 해양환경보전에 대해 선도적인 시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환동해 환경백서 2003’을 발간하였으며, 2002년에는 ‘환동해 지역 「산의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동북아 지역 환경보호 국제유스회의’를 2005년 9월에 개최하였다. 또한 NEAR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를 2004년 2월부터 웹사이트를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2005년 7월 개최된 제7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개별 프로젝트로 ‘동해·황해연안 해변의 표착물 조사’와 ‘동북아 지역의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동북아 청소

년 환경 심포지엄'이 계속과제로 제안되었으며, 신규과제로 러시아 연해주가 '동해의 해저 지형 및 저생생물군집의 생물 다양성과 분포 조사'를 제안해 추진 중에 있다.

라. 방재분과위원회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지진과 수해, 산불, 가뭄 등 다양한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에 대한 각 국가 및 자치단체의 대처 능력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NEAR는 일본 효고현을 중심으로 1999년 방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방재체제를 내실화하고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 전체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연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방재분과위원회에서는 매년 방재연수 및 방재거점 시찰을 하고 있으며, 방재연구의 성과 등을 회원단체에 제공해 오고 있다.

방재분과위원회에서 행한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을 보면, 우선 각 자치단체의 방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방재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각 국 및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나 각 자치단체의 방재체제, 방재시책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재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방재관련 정책 소개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방재시설에 대한 시찰연수를 통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방재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인 효고현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고베대지진) 이후 재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센터', '재해의료센터',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아시아방재센터' 등 현대 방재거점시설에 대한 시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방재대책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방재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마.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코디네이터인 토야마현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간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강화 및 미래 발전을 위해 인재육성과 정보교류 등 NEAR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인재육성사업’과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조사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회원단체 홈페이지 현황 파악 및 상호 링크 강화’ 등의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인재육성사업’은 1999년 시마네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자치단체의 인재육성 사례 소개 및 제안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3회 분과위원회에서는 NEAR의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재육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인재육성 액션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우호단체와의 교류의 틀을 넘어서 다지역간의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인재육성사업’은 자치단체간 직원 상호 파견사업과 유학생과 연수생 등의 파견 및 수용사업, 청소년 해외파견 사업, 회의와 이벤트에 참가 및 초빙, 외국어 교육 및 외국어 학습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육성된 인재들은 지역의 발전과 상호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자치단체 직원의 상호 파견사업은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해를 진척시키며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는데 매우 유효하고, 유학생의 수납과 청소년 등의 파견사업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는 동북아 지역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교류와 협력의 경향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여성들의 의견 교환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2001년 10월 토야마현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 비약하는 동북아시아의 창조”를 주제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교육과 경제, 환경, 건강 등 4개의 테마와 총괄 섹션에서 “함께 사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로서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선언”을 채택하였다.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를 주도한 토야마현은 이 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 여성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서 지속적인 개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는 동북아 지역 연구기관들 간의 연구성과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조사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강화’사업

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제2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 연구기관들의 리스트 작성에 합의하고 이를 활용해 연구기관간 보다 폭넓은 제휴와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했으며, 나아가 각 연구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링크, 운영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했다. 이 밖에도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인 토야마현은 회원단체의 홈페이지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링크를 강화하고 있다.

바. 변경협력분과위원회

변경협력분과위원회는 2004년 9월 제5차 NEAR 총회에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경주에 의해 제안, 설치된 분과위원회로 현재에는 러시아 아무르주가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 분과위원회는 변경지역에서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간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변경지역 회원단체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변경협력에 관한 법률과 변경무역법 공동 제정, 비자발급 간소화 및 투자촉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 과학기술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는 2006년 9월 경기도의 제안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동북아 지역의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와 공동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인 경기도는 향후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간의 과학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 박람회, 과학기술 교류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3.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분석

NEAR 회원단체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는 조사시점인 2006년 6월 현재까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의견조사서는 6개국 40개 회원단체중 북한의 2개 단체(함경북도, 나선특급시)를 제외한 5개국 38개 단체에 배포했으며, 그 결과 5개국 27개 단체¹⁹⁾의 담당자들이 회신해 71%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회원단체의 'NEAR 참여 목

19) 한국이 10개의 회원단체 중 5개, 일본은 11개의 회원단체 중 10개, 중국은 5개의 회원단체 중 4개, 러시아는 10개의 회원단체 중 7개, 몽골은 2개의 회원단체 중 1개의 회원단체가 조사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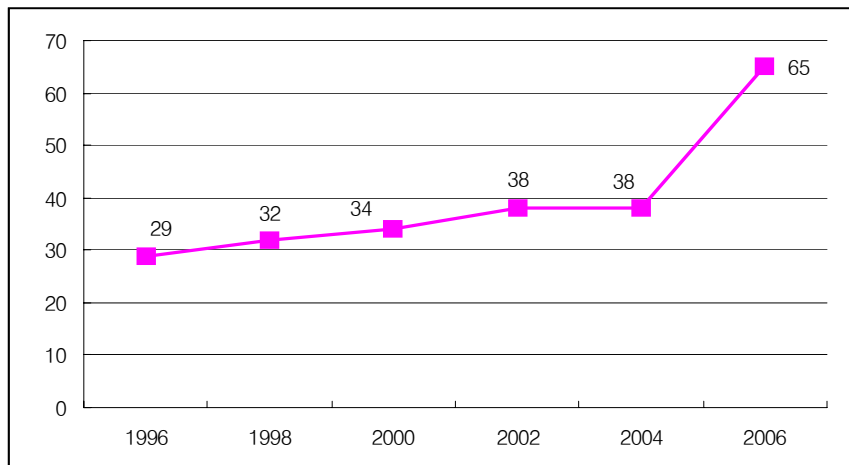
적'에서부터 '분과위원회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다.

가. NEAR 참여 목적

분과위원회 활동과 그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회원단체들의 NEAR 참여 목적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27개 자치단체들 중 대부분인 22개 단체가 1996년 NEAR 창립 멤버로 가입했으며, 나머지 5개 단체는 1998년과 2000년 각각 가입했다. 의견조사가 창립 멤버에 편중된 이유는 <그림 3-1>에서 보듯이 회원단체의 수가 급증한 2006년을 제외한다면²⁰⁾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NEAR가 창립 멤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효고현 등 7개의 회원단체는 1993년 창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참여했으며, 현재에도 NEAR의 운영과 다양한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 NEAR 회원단체 증가 추이

(단위: 회원단체 수)



20) 2006년 9월 개최된 제6차 총회에서 몽골의 20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4개국에서 27개 단체가 신규 가입함으로써 NEAR의 회원단체 수가 급증했다. 신규 회원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본 조사의 성격이 회원단체의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의 참여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고, 조사시점이 총회 개최 이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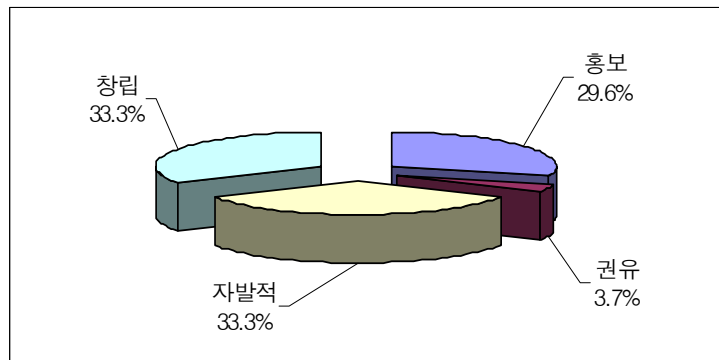
이러한 창립 멤버 중심의 NEAR는 “가입계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 적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와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EAR 가입계기가 “NEAR 홍보활동”이나 “이웃 자치단체의 권유에 의해서”라는 소극적인 가입보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입한 단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NEAR와 같은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자발적인 가입”과 “창립을 통한 참여”를 모색했던 단체가 전체 27개 중 18개 단체로 2/3(6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 NEAR 가입계기

(단위: 회원단체 수)

	홍보	권유	자발적	창립	합계
한국	3	-	1	1	5
일본	2	-	1	7	10
중국	2	1	1	-	4
러시아	-	-	6	1	7
몽골	1	-	-	-	1
합계	8	1	9	9	27

<그림 3-2> NEAR 가입계기



“NEAR에 참여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27개 자치단체 중 24개의 자치단체가 경제통상부문에 참여 목적이 있음을 응답해 회원단체 대부분이 경제교류와 협력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회원단체 들은 정보교류(20개 단체)와 우호친선(17개 단체) 역시 NEAR 참여 목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회원단체간 공동발전과 상호이해 증진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협력과 자원협력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11개 회원단체와 7개 회원단체들이 NEAR 참여 목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환경과 자원문제가 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협력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환경협력에서는 일본의 자치단체가, 자원협력에서는 러시아의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의 관심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보호를 위해 환경보전과 방재에 상대적으로 높고, 자원부국인 러시아는 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3-6> NEAR 참여 목적(복수응답)

(단위: 회원단체 수)

	경제통상	문화교류	우호친선	정보교류	환경협력	자원협력
한국	4	1	3	4	-	1
일본	8	3	5	5	6	-
중국	4	3	4	4	3	2
러시아	7	6	5	6	2	4
몽골	1	1	-	1	-	-
합계	24	14	17	20	11	7

나. 분과위원회 활동과 운영

대다수의 NEAR 회원단체들은 각자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단체들의 다양한 활동경험에 대한 조사는 분과위원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및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우선 분과위원회의 참가 여부를 질문에서 일본의 야마가타현과 중국의 하남성, 영하회족자치구 등 3개 단체를 제외한 24개 회원단체가 분과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분과위원회별 참가 회원단체를 보면,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에 가장 많은 각각 18개의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교류분과위원회와 방재분과위원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 회원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술한 “NEAR 참여 목적”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EAR 참여 목적”에서 환경협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과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이유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회원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협력프로젝트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7> 참여 분과위원회(복수응답)

(단위: 회원단체 수)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	변경협력
한국	5	-	1	-	2	-
일본	6	3	9	5	6	-
중국	1	1	1	-	-	1
러시아	6	3	6	5	3	5
몽골	-	-	1	1	1	-
합계	18	7	18	11	12	6

다음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단체들은 분과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회원단체의 응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17개 회원단체가 응답한 내용을 보면, “분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기모임이나 포럼 등과 같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대하여 정보공유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현실성있는 공동협력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굴”과 “상호교류 확대”, “참가 회원단체에 대한 메리트 제공”, “순회형 코디네이터 시스템 구축”, “분과위원회 회의의 순회 개최” 등을 통해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의 이면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단체 대부분이 참여에만 의미를 두는 소극적인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과 그 기회 및 홍보의 부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의 발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대한 질문에서 <표 3-8>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 27개 응답단체 중 18개 회원단체가 답

변이 없거나 희망하지 않다고 응답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원단체의 생각은 “새롭게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를 묻는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20개의 회원단체가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그 이유를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창설보다는 기존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분과위원회의 개편이나 통합도 고려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표 3-8> 추가참여희망 분과위원회(복수응답)

(단위: 회원단체 수)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	변경협력	없음	합계
한국	-	1	1	-	-	1	2	5
일본	-	-	-	-	-	-	10	10
중국	-	-	-	-	1	-	3	4
러시아	3	2	2	1	3	3	2	16
몽골	-	-	-	-	-	-	1	1
합계	3	3	3	1	4	4	18	36

다른 한편 “추가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의 질문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이점은 러시아의 회원단체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표 3-8> 참조) 이는 체제전환이후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들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서 일부 회원단체들이 제시한 분과위원회를 보면, 관광과 건강보건, 해양과학기술, 투자유치관련 분과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의 4개 회원단체들이 관광분과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표 3-9> 참조)

<표 3-9> 신설 희망 분과위원회

(단위: 회원단체 수)

	관광	건강보건	해양과학기술	투자유치	없음	합계
한국	1	1	-	-	3	5
일본	2	-	-	-	8	10
중국	1	-	1	-	2	4
러시아	-	-	-	1	6	7
몽골	-	-	-	-	1	1
합계	4	1	1	1	20	27

다.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NEAR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단체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프로젝트는 각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기획,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단체들은 각자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력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결국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는 참여 회원단체들의 개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NEAR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단체가 원하는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회원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표 3-10>에서는 그동안 NEAR 분과위원회에서 실시되었거나 현재에도 실시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각 프로젝트별 참여자치단체의 수를 조사, 취합한 결과를 명기하고 있다. 각 협력프로젝트별 참여단체를 조사한 이유는 협력프로젝트가 분과위원회별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회원단체의 실제 참여는 분과위원회의 소속여부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인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7개 응답단체 중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4개 회원단체를 제외한 23개 회원단체가 평균 4.5개의 협력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력프로젝트별 참가단체 수를 보면, 19개 회원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동북아시아비즈니스추진회의’가 가장 많았고,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인재육성사업’(16개 단체)과 환경분과위원회의 ‘동해-황해연안해변표착물 조사’(14개 단체)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일본 토야마현과 러시아 연해주 지방간에 한정된 ‘동북아

시아철새공동조사'와 같은 협력프로젝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회원단체의 이익추구를 위한 관심이 경제교류와 협력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회원단체의 'NEAR 참여 목적'과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었다.

<표 3-10> 참여 협력사업(복수응답)

(단위: 회원단체 수)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합계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	5	4	4	6	-	19
동해-황해연안해변표착물 조사	2	8	1	3	-	14
동북아철새공동조사	-	1	-	1	-	2
동북아청소년환경심포지엄	1	2	1	1	-	5
동북아국제환경보호심포지엄	1	6	2	1	1	11
교류의 날개사업	1	1	1	1	-	4
국제문화팔레트사업	-	1	1	1	-	3
문화교류분과위원회개설	-	1	1	-	-	2
방재연수 및 시찰	4	-	2	4	1	11
방재대책시스템 및 정보교류협력	4	-	2	4	1	11
인재육성사업	3	8	1	4	-	16
동북아여성회의	-	1	-	-	-	1
변경지역경제무역협력활성화	-	-	-	6	-	6
합계	21	33	16	32	3	105
협력프로젝트 미참여 단체	-	3	1	-	-	4

다음으로 현재 수행중인 협력프로젝트의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회원단체들은 협력프로젝트의 개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응답을 보면,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의견교환 및 실무회의와 같은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대외홍보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회원단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회원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사업 간의 연계 및 통합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율을 증대”해

야 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바이어의 참여도 필요”하고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환경과 방재부문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나 조사 또는 단순한 정보교류보다는 각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에 대한 공동 요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본 질문에 대한 회원단체 대부분의 의견은 실질적인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협력프로젝트”와 “신설하기를 희망하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에서는 분과위원회 부문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현재 참가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 행한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의 분석결과를 보면, 국가별 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회원단체들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상호이해 증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운영과 성과에 대한 요구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NEAR는 국제적인 기구로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6년 출범과 더불어 현장을 제정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NEAR는 기구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설사무국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역내 자치단체의 회원가입을 독려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NEAR는 회원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협력프로젝트는 NEAR가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회원단체의 요구와 합의에 의해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는 곧 NEAR 발전으로 이어지는 바,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조사와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가. 전반적 평가

먼저, 분과위원회 운영 면에서의 특징을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전문성과 체계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협력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들의 관심영역을 중심으로 세분화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소수 몇몇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NEAR의 각 분과위원회는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나 각종 협력프로젝트 역시 코디네이터 소재지역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개최, 추진됨으로써 타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의 순회 개최나 협력프로젝트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분과위원회의 회원단체와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의 참여단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분과위원회의 협력프로젝트에서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옵저버로서의 참가자격을 부여해 회원단체와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분과위원회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많은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프로젝트 참가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비소속단체의 지속적인 참여 부족과 약한 참여의지로 인해 협력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협력프로젝트 참가단체의 단계적인 분과위원회 가입을 독려해 참가단체의 소속감과 참가의지를 고양함으로써 협력프로젝트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회원단체 NEAR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보면, 우선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성과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및 구체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단순한 교류관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활발한 참여나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포럼이나 심포지엄과 같은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회원단체들이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가 소수의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활동에 대한 정보 취득의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운 분과위원회나 협력프로젝트의 개발보다는 기존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우선적이며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회원단체들이 새로운 분과위원회나 협력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분과위원회 활동이나 협력프로젝트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단체들은 관광부문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회원단체들은 NEAR 가입에서부터 협력프로젝트 참여에 이르기까지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회원단체의 가장 근원적인 참여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역할강화가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나. 분과위원회별 평가

협력프로젝트의 분석결과 도출된 특징과 문제점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상북도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후 협력프로젝트를 개발, 수행하고 있는 타 분과위원회와는 달리 1998년부터 독자적으로 시작한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에 포함해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의 발전에 따라 지속성과 적극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가 공무원과 기업인, 바이어가 함께 참가하는 학술회의와 통상비즈니스 등을 함께 진행하는 복합 경제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회의는 참가 단체의 홍보의 장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경제통상관련 정보교류는 미흡한 실정이며, 참가 기업 역시 일부 자치단체의 기업으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가 복합경제이벤트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참가하여 개별적인 투자환경과 기업환경, 우수 상품 및 기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상품 상담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출상담회에서는 개최지의 상품에 대한 상담이 중심이 되고 있어, 다양한 단체와 기업의 참여와 상품의 전시 및 상담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 외에 진행되는 협력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를 위한 ‘동북아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그리고 총회 개최지에서의 ‘동북아 기업박람회’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구축된 ‘동북아경제통상네트워크’를 제외한다면 답보상태에 있다. 투자 촉진을 방안 마련과 총회와 함께 기업박람회의 동시 개최 필요성에 대한 회원단체들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투자촉진협의회’와 ‘동북아 기업박람회’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역시 코디네이터인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시마네현 자체의 청소년과 주민의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차원의 국제기구인 NEAR의 협력프로젝트로 보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협력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청소년교류사업’을 보면, 시마네현과 자매단체인 한국의 경상북도와 중국의 영화회족자치구 간의 청소년교류사업으로 시작해 중국의 길림성과 흑룡강성과 러시아의 연해주와 사하공화국 등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성격은 갖추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각 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했던 것과는 달리 2004년부터는 ‘동북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로 사업명을 바꾸어 시마네현 내에서만 개최함으로써 시마네현 행사로 축소되었다. ‘국제문화팔레트 in 시마네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개최된 이 사업에서는 현재까지 영화회족자치구의 가무단과 블라디보스톡의 민요단 만이 참가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개별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교류분과위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교류사업’으로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인재육성사업’과 유사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두 분과위원회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그 성격을 구체화하거나 통합 운영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경분과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과위원회 중 가장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분과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협력프로젝트의 선정과정이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 및 추진과정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참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의 제안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참가 의향조사와 의견 조정을 거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 결정된 개별 프로젝트를 제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방식의 장점을 보면, 첫째, 해당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단체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둘째, 많은 회원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성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고, 셋째, 협력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도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가 아닌 협력프로젝트 제안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책임성과 적극성을 부여할 수 있어 협력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안프로젝트에 대한 참가의향조사와 의견조정과정을 거침으로써 협력프로젝트의 부진 또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는 조사와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에만 그치지 말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에 대한 공동 요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환경분과위원회의 협력프로젝트들이 자치단체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기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방재분과위원회의 특징은 각 자치단체가 방재관련 능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코디네이터인 효고현이 자신에 대한 방재연수 및 방재거점시설의 시찰을 통해 방재관련 지식과 정보 및 노하우를 회원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효고현은 동북아 지역의 재해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면서 다자간 방재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6차 총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향후 분과위원회를 정보교류식에서 참가형·과제해결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²¹⁾ 이를 위해서는 효고현의 일방적인 주도보다는 방재관련 정보의 공유와 홍보 등

21) NEAR 제6차 총회 회의자료집.

을 통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재대책을 지진 중심에서 벗어나 태풍과 홍수, 산불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방재관련 공동연구와 공동포럼 및 재해민 원조나 재해 예방관련 협력프로젝트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간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기초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들의 관심과 참여율은 높지만 토야마현을 대신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단체가 없다는 점과 문화교류분과위원회와의 활동범위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교류와 조사수준을 벗어난 NEAR차원의 실질적인 교류협력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문화교류분과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이나 통합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다자간 인적 교류와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회원단체들은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 이익과 NEAR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운영과 구체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의 모색, 그리고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단체의 다양한 의견은 NEAR가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의 생존과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적 차원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제4장

협력프로젝트 활성화와 사무국의 역할 강화

오늘날 국제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는 회원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결집하는 매개체로써 개개의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프로젝트들을 개발, 운영하면서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NEAR 역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협력프로젝트의 개발과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NEAR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작단계에서 구체화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위치해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계적이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무국의 역할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협력프로젝트의 단계적 활성화 방안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결과, 회원단체들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포함한 협력프로젝트의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 단기적 활성화 방안

분과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환경분과위원회의 협력프로젝트 선정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모두 3단계의 과정(제안조사 → 참가의향조사 및

의견조정 → 추진)을 거쳐 개별 협력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제안조사’를 통해서 회원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의 개발과 회원단체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가의향조사 및 의견조정’과정에서는 회원단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단계에서는 협력프로젝트를 제안한 회원단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어 협력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협력프로젝트의 이러한 선정과정은 회원단체들이 관심과 참여를 지속하고 협력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제안, 운영할 수 있어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가 소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단체들이 개별 협력프로젝트의 선정 및 추진과정과 전반적인 분과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EAR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교류와 공유 및 대외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NEAR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 화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완비하고 있다. 이러한 홈페이지를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NEAR 사무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비롯한 최신 정보를 회원단체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알림으로써 정보교류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단체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거나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같이 온라인상의 협력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는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의 분과위원회 참여는 실현가능하고 발전가능한 현실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협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NEAR 분과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전문가나 실무자보다 현실성과 전문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간기업이나 환경단체 등이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력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경

협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프로젝트의 제안과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인회의’를 ‘시장회의’와 함께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OEAED에서처럼 독립된 회의기구를 두어 참여시킬 수도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직접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에 KOTRA나 JETRO와 같은 각국의 경제단체 대표자들을 참여시킨다면 회원단체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단체의 참여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회원단체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코디네이터 외의 회원단체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과 회의 개최시 관련 협력프로젝트를 동시에 개최하는 고려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에서만 개최되고 있고, 협력프로젝트 역시 이를 주도하는 자치단체가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가 별개로 개최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가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소수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기타 참여단체의 무관심과 소극성, 정보 접근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를 여러 참여단체들이 순회 개최해야 할 것이다.

나. 중장기 활성화 방안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와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코디네이터 외에 국가별 1개씩의 회원단체를 선정해 이들에게 코디네이터에 대한 서포터의 역할을 수행케 한다면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회원단체는 자국 회원단체와 분과위원회 간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단체들은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반대로 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월한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서포터의 활동 경중

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 공무원과 학자, 기업인,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보 교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최신 정보의 취득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원단체들은 각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써 정기적인 포럼이나 심포지엄의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 회의와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거나 협력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회원단체가 협력프로젝트와 관련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회원단체간 정보 교류와 공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프로젝트와 분과위원회에 대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보공유의 장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자나 기업인, 민간단체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한다면, 그 전문성과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회원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NEAR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세계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비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협력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 역시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정치문제 등으로 국가 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단체들은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NEAR가 국가적 차원의 협력체 탄생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각국의 중앙정부에 인식시킴으로써 NEAR 활동과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들은 그 종류와 발전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이해와 협력이 필연적이다. 예를 든다면, 환경분과위원회의 각종 협력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참여나 국가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협력프로젝

트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은 그 자체 발전의 토대가 되고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 국가와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2. 사무국의 역할 강화 방안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일반적으로 회원단체간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있으며, 타 회원단체의 경험이나 선진기술 이전 및 회원단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NEAR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무국이 그 활동의 중심에 서 있다. 사무국은 NEAR 발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회원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NEAR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무국은 정보 교류와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 사무국은 단기적으로는 각 분과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 정리하여 회원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최신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등 철저한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회원단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NEAR 홈페이지가 회원단체들에게 핵심 정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사무국은 분과위원회의 협력 하에 정기적인 포럼이나 심포지엄 등을 다양한 주제로 기획, 개최함으로써 회원단체들에게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무국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사무국은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단체의 NEAR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 정리해야 한다. 사무국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넓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각 회원단체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유사한 사업들을 조사, 발굴해 NEAR 차원의 협력프로젝트로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안,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무국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 및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각 회원단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연구기능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협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서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어렵기 때문에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연구와 분석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즉 사무국에서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국은 우선적으로는 연구기관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협력프로젝트뿐만 아니라 NEAR관련 연구결과 및 연구자를 공유하고, 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프로젝트와 NEAR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해협연안 지사교류회의’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기관간 협력은 심층적인 상호 이해가 가능하며, 다양한 시각과 방안이 폭 넓게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더 나아가 사무국은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연구기능을 갖추으로써 협력프로젝트뿐만 아니라 NEAR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무국은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대외 홍보뿐만 아니라 대내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협력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회원단체나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무국은 이들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회원단체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나 협력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회원단체는 그 활동 정보를 사무국에 수시로 제공해야 할 것이며, 사무국에서는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그리고 각종 회의와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와 정보 공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사무국은 NEAR의 협력프로젝트가 타 국제기구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들은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DP는 세계은행과 UNEP와 함께

지구온난화와 국제해양오염, 오존층 보존 등 세계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ULA는 국제사회에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투영하기 위해 UNDP와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들은 타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코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NEAR의 협력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회원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협력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무국은 중장기적으로 타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NEAR 협력프로젝트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는 오늘날 국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과거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그 중요행위자로서 국제사회를 경영했지만,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해 국제사회의 諸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는 그 구성원과 활동영역 등에 따라 전문화, 세분화되어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지난 세기말 동북아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차원의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역사상 한 번도 국가간 협의체나 국제기구의 경험이 없었던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 시기에 와서도 북한 핵문제와 영토 문제, 역사문제 등으로 타 지역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의 국제기구를 창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화라는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조류 사이에서 자치단체들은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정치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창설을 도모했던 것이다.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차원의 국제기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기구에 대한 무경험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직은 초보단계라 할 수 있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NEAR 역시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의 발전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NEAR는 헌장을 제정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회원단체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 속에서 최근 들어 NEAR 내부에서는 질적 성장의 필요성과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NEAR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회원단체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프로젝트들은 상호 이해관계의 증진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자치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회원단체들은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 및 구체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프로젝트의 개발과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회원단체의 인식을 보면,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가장 높고, 신규보다는 기존 분과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상호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단체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단계적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단계적으로는 첫째, 분과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및 회원단체의 관심 제고를 위해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3단계 협력프로젝트 선정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둘째, NEAR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운영과 활용을 통해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공유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KOTRA나 JETRO 등과 같은 민간전문단체를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공무원 중심의 분과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넷째,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 증대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분과위원회 회의의 순회 개최와 협력프로젝트의 동시 개최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력프로젝트의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1국 1자치단체를 서포터로 선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력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공무원과 학자,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기획, 개최함으로써 회원단체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제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협력프로젝트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협력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바, 사무국은 각 분과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보 교류와 확산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무국은 협력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및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단체의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사무국은 협력프로젝트의 홍보뿐만 아니라 타 국제

기구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회원단체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그 협력프로젝트인 ‘동북아비즈니스축진회의’의 활성화 및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과위원회 회의에 KOTRA와 JETRO와 같은 각국의 경제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비즈니스축진회의’를 경상북도의 기업과 상품만을 전시, 상담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자치단체의 기업과 상품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회의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동북아비즈니스축진회의’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기업들에게도 더 큰 수출상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 단체와 기업, 상품의 확대는 바이어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연 1회 개최하는 ‘동북아비즈니스축진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면서 그 중 1회는 다른 회원단체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회원단체 역시 유사한 전시회나 상담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개최는 ‘동북아비즈니스축진회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술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3단계 협력프로젝트 선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단체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비즈니스축진회의’ 이외에는 추진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가 없다. ‘민관투자축진협의회’나 ‘동북아 기업박람회’는 제안후 진전이 없으나, 단계별 선정과정을 거친다면 회원단체의 이해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회원단체를 확인할 수 있어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회원단체들이 희망하는 실질적인 협력프로젝트의 개발도 가능하다.

넷째, 유명무실한 ‘민관투자축진협의회’를 구체화해 다양한 회원단체의 공무원과 기업인이 참가하는 투자설명회나 기업설명회 등과 같은 사업을 기획,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2002년 경상북도가 발의했던 총회와 함께 ‘동북아 기업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은 그 협력프로젝트 자체뿐만 아니라 총회의 내실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상북도는 경제통상위원회 회의를 대구경북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회의와 전시-상담회 개최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역사문화관광과 산업시찰뿐만 아니라 대구와 연계한 패션 관련 공동행사 등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준(1999).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 『국제교류』, 제25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김익식(2004).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교류 증진”, 『지방의 국제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김홍래(2004). “UCLG 출범과 지방의 국제화”, 『지방의 국제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문장순(1996).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 『부산정치학회보』, 제6집, 부산정치학회.
- 신기현(199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지방자치연구』, 제4집,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안영훈(1999).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방의 국제화”, 『지방의 국제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양기호(2004).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중·일 지방간 국제교류”, 『일본연구논총』, 제20호.
- 이동형(2005).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상설사무국 운영 및 활용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임종헌(2003). “유럽 지방정부의 초국가적 연계와 비교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NEAR)의 과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한독사회과학회.
- 최승업(2004a). 『환동해 Peace Sea Vision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최승업(2004b).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계획과 강원도의 Peace Sea Vision”, 『동북아시아 대 환동해 지방정부간 신교류·협력』,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 최승업(2000). “지방의 국제교류 추진사례와 한계: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지방의 비전과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1999). “유엔인간정주센터(UNCHS)”, 『국제교류』, 제36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2). “유럽 자치단체 및 지역 회의(The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지방의 국제화 포럼』, 제68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a). 『자치단체관련 국제기구 편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3b). “국제 자매·교류 도시연맹(FMCU-UTO)”, 『지방의 국제화 포럼』, 제79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6). 『지방자치단체 국제자매결연현황 2006』.

Norindr, Somsey(1999).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교류』, 제26호,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gico.go.kr>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neargov.org>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 홈페이지, <http://www.pysih.net/kr>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홈페이지, <http://www.cities-localgovernments.org/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홈페이지, <http://www.metropolis.org>

유럽자치단체 및 지역협의회(CEMR) 홈페이지, <http://www.ccre.org>

유엔개발계획(UNDP) 홈페이지, <http://www.undp.org>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홈페이지, <http://www.unescap.org>

유엔인간정주센터(UN-HABITAT) 홈페이지, <http://www.unhabitat.org>

자치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jachi.co.kr>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klafir.or.kr>

한일해협연안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info.japan-korea-strait8.org>

경상북도 내부자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의자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홍보자료.

설 문 지

NEAR 분과위원회 및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담당자)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회원단체 여러분!
 귀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는 NEAR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지역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NEAR 협력프로젝트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은 NEAR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들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향을 조사해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NEAR의 발전과 각종 협력사업의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단체 여러분들의 고견을 성심성의껏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6.

공 동 연 구 기 관	NEAR 사무국 주소: 포항시 남구 지곡동601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311호 TEL: 054-223-2320 Fax: 054-223-2300 E-mail: 담당자:	대구경북연구원 주소: (706-713)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대동타워 18층 TEL: 053-770-5123 Fax: 053-770-5059 E-mail: dhlss1@dgi.re.kr 담당자: 이 동 형
----------------------------	---	--

※ 해당되는 번호에 “V” 표 하거나, 빈칸에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자치단체는 NEAR에 언제 가입했습니까? (년)
2. 귀 자치단체가 NEAR에 가입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NEAR 홍보활동을 통하여 ② 이웃 자치단체의 권유로
③ NEAR의 존재를 알고 자발적으로 ④ 기타 ()
3. 귀 자치단체는 NEAR 활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부문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경제통상 ②문화교류 ③우호친선 ④정보교류
⑤환경협력 ⑥자원협력 ⑦기타 ()

[분과위원회 활동]

4. 귀 자치단체는 NEAR의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①참가하고 있다(5번 문항으로 이동) ②참가하지 않는다(7번 문항으로 이동)
5. 어느 분과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①경제통상분과위원회 ②문화교류분과위원회 ③환경분과위원회
④방재분과위원회 ⑤일반교류분과위원회 ⑥변경협력분과위원회
6. 참가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7. 현재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추가로 참가한다면, 어떤 분과위원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합니까?
①경제통상분과 ②문화교류분과 ③환경분과 ④방재분과
⑤일반교류분과 ⑥변경협력분과 ⑦없다
8. 만약 새로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어떤 종류의 분과위원회를 희망합니까?

[협력프로젝트]

◎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협력사업
경제통상	경상북도	- 동북아 비즈니스추진회의 개최 (1998, 1999, 2002, 2003, 2004, 2005)
환경	토야마현	- 동해와 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2000~) - 동북아시아지역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2000~) -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엄 (2004) - 동북아시아지역 국제환경보호 세미나 (2001~2003)
문화교류	시마네현	- 동북아시아지역 청소년교류프로그램 ‘교류의 날개’ (2001~2005) - 국제문화 팔레트 사업 (2005~) - 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2004)
방재	효고현	- 방재연수, 방재거점 시찰 (2002~) - 방재대책시스템 및 정보교류협력사업 (2002~)
일반교류	토야마현	- 인재육성사업 (2000~) - 동북아여성회의 (2001)
변경협력	하바롭스크변경주	-변경지역 경제무역 협력 활성화 (2005~)

9. 귀 단체는 어떤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10. 귀 단체에서 참여하는 협력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들 중 추가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12. 만약 새로운 협력사업을 개발한다면, 귀 단체에서는 어떤 협력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를 희망합니까?

◆ 연구자 소개

▷ 이 동 형

대구경북연구원 환동해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현)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역임

정치학박사(Ph.D),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